

##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 - 양극화와 공동체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여 -

이국운 한동대학교 헌법/법사회학 교수

- I. 정치적 책임의 원칙
- II.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주의 운동
- III.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
- IV.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과 그 붕괴에 관하여
- V.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의 관계 상황

### I. 정치적 책임의 원칙

이 글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와 함께 공동체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프로테스탄트들의 현실을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논의의 단계상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그 모두를 본 학술대회의 다른 발제들을 포함하여 프로테스탄트 사회 안팎의 다양한 기성 논의들에 맡기고, 오로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는 작업에 집중하고자 한다. 논의의 주제를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로 잡은 것은 이와 같은 실천적 지향을 투영하기에 그 주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사회 안팎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성숙도에 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몇 차례의 전국적 선거에서 소위 기독교 정당들 연달아 국회 의석 확보에 실패한 이후, 특히 과격하고 편향적인 정치적 언사에 대한

비판과 외면이 일상 담론의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교회 세습이나 사제들의 추문 등을 둘러싼 교회 정치 내부의 혼란상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기독교 사회 내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분명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지고도 제도권 교회조직에 참여하기를 마다하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 현상이 시간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모두 특히 젊은 세대에서 프로테스탄트 인구의 현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자문(自問)에 대하여 대답이 궁색하기 때문일까? 최근 들어 기독교 사회 인팍에는 차라리 정치를 접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더욱 본질적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다. 이를테면, 생명과 인권, 배려와 연대의 가치들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속물근성에 젖은 세속정치 또는 정치 그 자체와 절연하는 곳에서부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다. 이들에게 지난 이십여 년간 로마가톨릭 교회가 봉건적 군주제의 조직구조를 고수하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큰 대중적 호감과 영향력을 얻게 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치권력에 초연한 듯한 외관 속에서 초월적 가치들 고리 삼아 세속정치에 시의적절하게 개입하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모델은 갈수록 꼬이는 프로테스탄트들의 현실에 비추어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로부터의 철수’ 또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벤치마킹은 한국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과연 바람직한 정치적 대안일 수 있을까? 주지하듯이 이 문제에 답하려면, 세속정치의 본질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토론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반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그 일단을 펼칠 여유는 없으므로 간단히 개인적인 입장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나는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속정치에 대한 소명을 출발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정치신학적 토론을 진심으로 염원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서, 로마가톨릭 교회의 모델을 염두에 두는 한, ‘정치로부터의 철수’가 합리적인 정치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1517년 발발한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래 프로테스탄트들은 책임의 문제에 관하여 고유한 이해를 진전시켜왔다. 그 핵심은 무엇보다 인간은 세상사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로서, 소명, 천직, 청지기 등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중심개념들은 모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신적 주권과 관련하여 받아들인다. 인간의 정치적 소명은 신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간은 신 앞에서 세계에 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제도적 교회나 기독교 사회 바깥으로 확장했다. 그들의 정치적 책임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공동체와 역사 및 세계 전체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책임의 원리를 염두에 둘 때, '정치로부터의 철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명확하다. 정치로부터의 철수는 과연 프로테스탄트들이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가? 시야를 제도적 교회 안쪽으로 좁혀서 관찰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성도가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조직이다. 수십만의 사제와 그 가족들이 있고, 엄청난 규모의 교회 재산이 있으며, 학교와 병원과 언론 등 관련된 조직들만도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 속에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신조(creed)가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수호하는 시스템도 존재한다. 19세기 말부터 친미개화반공노선을 기치로 근대적인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앞장서 온 역사와 자긍심도 있다. 비록 최근 들어 정치적 성숙도에 관하여 안팎으로부터 비판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영광과 기억까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지 제도적 교회의 내적 요인만으로도 한국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하루아침에 정치로부터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기 어렵다. 이들은 이미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더욱 정확하게 표현해서, 제도적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과도하게 정치화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세속정치로부터 후퇴시키는 것이 정치적 목표라면, 이는 반드시 제도적 교회는 물론 기독교 사회에 그 바깥 전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더욱 잘 부담하는' 대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질서정연한 후퇴가 아니라 무책임한 회피는 오히려 근본주의적인 반동을 초래하여 제도적 교회나 기독교 사회 안팎에서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같은 논리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속정치에 개입하는 것 역시 정치적 책임의 관점에서 기획되고 정당화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개입과 후퇴는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합당한 수준의 정치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정치세력들과 신사협정을 도출하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의 신사협정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공적 협약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문제에 관련하여 지난 500년 동안 프로테스탄트들은 국가를 비롯한 정치공동체들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다른 정치세력들과 정치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하여 공적 협약으로서 '헌법'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정치적 전통을 발전시켜왔다.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Protestant constitutionalism)로 지칭되는 이 흐름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서 발원하여 오늘날 국가를 비롯한 정치공동체들에서 흔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정치의 맥락 속에서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처한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둔 채,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의 관계를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 앞서 말했듯,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와 함께 공동체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프로테스탄트들의 현실을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으려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연결점을 설명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크게 세 가지 맥락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발생하여 제도화, 분화, 체계화되는 맥락. 둘째, 그 성과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제도적 결실로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부터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와의 연계가 축소되거나 단절되는 맥락, 셋째, 이와 같은 재검토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프로테스탄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맥락. 이하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이 문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주의 운동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흔히 체제이념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인다. 체제 수호를 명분 삼아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중하게 맥락을 구별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갈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 즉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그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민주주의, 즉 정치공동체의 자율 통치를 최선의 정치형태로 내세우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그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흥미롭게도 정치적 현상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이 두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자의 모순적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존하고 또 지속하려는 특징을 가진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매우 이질적인 두 이데올로기의 결합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현상적 특이점이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순적 공존은 근대사회(modern society)라는 특정한 정치적 조건에서 추동되었다. 지난 세기 서구 지성들은 근대사회의 본질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왔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그 줄기를 두 가지로 간추려 보고자 한다. 하나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시민혁명의 흐름에서 보듯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규범적 전제가 보편화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혁명·기술주의·실증주의의 흐름에서 보듯 인간 상호 간의 사회적 관계 형식이 갈수록 익명화·기호화되는 것이다. 이 양자의 흐름이 중첩되는 근대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익명의 왕들로 구성된 사회’로 비유할 수 있다. 근대사회에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욕망과 민주주의 정치이데올로기가 끝없이 확산되며,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하여 증폭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을 통해 등장했다. 헌정주의란 헌법을 정치적 사유와 실천의 중심에 놓는 정치적 기획으로서 인류의 성숙한 문명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왔으나, 앞서 말한 근대사회의 독특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는 특히 헌법을

통하여 자유의 이념과 민주의 이념을 모순적 길항 관계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근대적 헌정주의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절대주의적 주권론과 무정부주의적 무주권론을 모두 거부하면서, 헌법과 법률의 이중체계를 중심으로 법의 지배를 내세운 제한주권론을 제도화했으며, 그 결과는 국민주권, 성문헌법,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대의 정부, 민주적 연방주의, 독점금지, 국제평화주의 및 국제인권보장, 생태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헌정주의적 혁신의 연속이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이자 근대사회 속에서 추진되는 헌정주의 프로젝트로 이해할 경우, 서구의 역사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원점을 이룬다는 점은 명백하다.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은 ‘하나님의 형상’, ‘오직 믿음’, ‘만인사제론’과 같은 교리의 전면화를 통하여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규범적 전제를 보편적으로 내세웠고,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과 자유의 문제를 사회적 삶의 안팎을 지배하는 차별의 벽을 허물고 평등을 실현하는 차원으로 연결한다.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위계질서에 대하여 만인사제주의와 직업소명설을 내세움으로써 성(聖)과 속(俗)의 제도적 구분을 무너뜨렸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존재의 대연쇄’에 의존하는 모든 종류의 위계적 사회이론을 거부하고 사유하는 개인의 자유로부터 그 개인들 사이의 근원적인 평등을 정초하는 평등주의적 사회이론을 발전시켰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오직 믿음’의 토대인 자유의 가능성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의 평등을 정당화하는 ‘보편적-정언적 자유의 요청’을 사회이론의 제일 명제이자 근본 규범으로 내세운다. 이러한 신학적 전복의 핵심 계기는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imago Dei)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구약성서의 선언이다(창세기 1장 26-7절). 오늘날에는 이 선언의 의미가 주로 인간 존재의 존엄과 가치가 그 초월적 인격성에서 비롯된다는 측면에서 조명되지만,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맥락에서 결정적인 것은 모든 인간이 신적 형상의 특징인 이성적 사유 능력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정당화한 측면이었다. 달리 말해, 프로테스탄티즘은 모든 인간 존재에 ‘신적 형상’이 내재한다는 신학적 논거로부터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정초하는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인격의 존재’를 확인했던 셈이다.

정치적 책임의 근거와 관련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은 자유에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정치적 책임의 방식과 관련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은 민주에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 점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자유의 이념과 민주의 이념의 모순적 길항 관계라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에토스를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부터 정당화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은 흔히 ‘하나님의 형상’과 ‘만인사제주의’로 요약되는 신학적 본질, 즉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속에서 어떠한 중개 없이도 신적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혁명적인 신앙에서 출발한다. 이 신앙 속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개개 인간의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에서

근거 지우며, 나아가 자유를 그 자체로 정당화한다. 자유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프로테스탄티즘은 정치적 자유의 제도적 실현을 ‘규범적으로’ 요구한다. 프로테스탄트 정치 신학은 원초적인 평등(radical equality)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에 당위로서의 위상을 부여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제도적 교회나 가부장, 귀족집단 등이 통치에 관한 신적 위임을 독점한다는 모든 종류의 특권의 논리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모든 인간이 통치에 관한 신적 위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원초적인 평등의 논리를 배치한다. 그리고 이 원초적인 평등의 논리를 평등한 인간들의 자율 통치, 즉 데모크라시만이 정당한 통치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자동성(political autonomy)의 이념에 연결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이 혁명적 정치 운동의 에토스를 가지는 까닭은 그 속에서 초월적 자유가 원초적인 평등 및 민주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멀리 아테네까지 소급되는 서구의 정치적 전통에서 데모크라시는 민주정치, 즉 자유인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에 기초한 공화주의적 합의정치를 묘사(descriptive)하는 용어였으나, 프로테스탄티즘은 이를 정면으로 역전하며 규범적(prescriptive) 용어인 민주주의로 고안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민주주의를 ‘좋은(the good)’이 아니라 ‘옳음(the right)’의 관점에서 이해했고, 그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은 출발점에서부터 끊임없는 확대와 심화, 그리고 자기혁신이 아니고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자기 통치’라는 이념과 연결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초기, 종교혁명가들이 경험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만인사제론이 초월적 자유와 원초적인 평등의 이념을 낳고, 이어서 그 실천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급진적 자유민주주의가 실험되는 모습이었다. 그 속에는 자유와 민주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감격이 분명히 존재했다. 물론 이 감격이 자유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담긴 모순적 길항 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었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은 양자의 공존, 타협, 접목, 조화의 가능성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파악하는 초월적 신앙으로부터 찾았다. 이 점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출발점에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의 동시적 추구라는 모순적 경향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두 방향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재구성하려는 급진적이고 발본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급진적·발본적 경향성은 이론적·실천적으로 근본적인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기독교회를 신자들의 보이지 않는 공동체(invisible church)로 정의하자, 현실에 존재하는 정치적 권위의 정당화에 난점이 발생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기치 아래 로마서 13장에서 성 바울이 제시했던 ‘모든 권위는 신으로부터 유래한다’는 명제에 의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와 같은 주의주의적 정당화는 곧바로 로마가톨릭 교회 내부의 주지주의자들이 이끈 반동 종교혁명의 공격을 받았고, 로마가톨릭 군주에 맞서 폭군방벌론을 주장하던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칼뱅주의자들에게

까지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실천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초기부터 내부의 교파적인 차이 문제에 시달렸다. 16세기의 유럽을 휩쓴 종교전쟁은 처음에는 프로테스탄트와 로마가톨릭 사이에서 발발했으나 오래지 않아 프로테스탄트 내부의 투쟁으로 번졌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신앙의 자유에서 출발하여 민주주의를 근거 지웠으나, 실제로는 결코 회해할 수 없는 진리 투쟁의 문제에 이르자 다수자가 소수자를 억압하는 반(反)자유주의의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프로테스탄트들의 대응책은 일차적으로 구약성서 및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확실히 더 '나은' 정치형태를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정치사를 토대로 신법 앞에서의 맹약(covenant)이나 그 맹약의 내용을 담은 성문헌법, 연방주의적 조직형태, 제사장-왕-선지자의 권력 분립 등을 도출하거나, 유럽 각국의 정치사에서 이른바 고대 헌법(ancient constitution)을 확인하고 그리스-로마 이래의 혼합정체(mixed government)론을 부활시키는 등의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물론 고전적 헌정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이러한 접근으로 자유와 민주의 초월적 정당화에서 유래하는 프로테스탄티즘 내부의 근원적인 긴장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통치에 참여하는 집단(demos)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보다 항상 적을 수밖에 없다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불일치' 문제는 여전히 결정적인 난문(難問)으로 남아있었다.

프로테스탄트 정치 운동은 이 문제를 신자들의 공동체(교회)에 정치적 모범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이는 신자/비신자, 교회/세상, 기독교세계/이교도세계 등과 같은 비대칭적 이분논리들을 내세운 뒤 후자를 포함하여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전자에 일차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로서, 교회의 목적을 섬겨야 할 그 바깥, 즉 비신자-세상-이교도세계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이념과 연결되는 논리였다. 이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추구라는 모순적 경향성을 전제로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재구성하려는 급진적이고 발본적인 정치 운동을 좁은 의미의 제도적 교회로부터 출발하여 결국 그 바깥의 세계 전체를 포괄하려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했다. 교회 정치에서 출발하여 바깥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심화하며 동시에 자기혁신을 도모하는 방식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발원한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특징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특징은 일정한 심리적 부작용과 연결되기도 한다. 예컨대 칼뱅주의 사회적 경건의 특징인 '부단히 활동하는 훈련된 개혁주의'가 '활발한 개혁가가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렇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칼뱅주의에 이런 유형의 죄책감을 완화할 장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끊임없는 개혁, 즉 정치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줄기찬 추구에 의해서만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부작용의 양태와 심도가 무엇이건, 그 결과 역사적 축적이 제도와 정신의 두 차원 모두에서 일정한 역사적 축적이 이루어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점을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과정을 조감하면서 간추려 보자.

### Ⅲ.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은 기독교가 이미 체제 종교의 위치를 굳건하게 차지한 가운데, 기독교공동체의 내부 투쟁으로 촉발되었다는 독특성을 지닌다.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이 발발했을 때, 로마가톨릭교회는 서구의 중세사회를 모든 측면에서 지배하고 있었고, 따라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일정 지역에서만이라도 기독교공동체 내부의 지배권을 차지하면 그 모든 조건을 승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독특성 덕분에 프로테스탄티즘은 마르틴 루터 이후 적어도 200년간 북유럽의 일정 지역에서(그 이후에는 북아메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 기독교회는 물론 사회 전체에서까지 프로테스탄트가 다수이자 주류가 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례 없이 유리한 종교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신약성서의 혁명적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면화하는 기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로마가톨릭 교회의 존재를 부정한 정치적 공백 위에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추구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상하고 실현해야 했다라는 점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과정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전사(前史)로도 볼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관점과 입장에 따라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추구를 위한 다양한 변용을 시도하고 또 정당화했으며, 그 경험은 이후 주로 주권적 국민국가를 무대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위한 자료가 되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실험은 아마도 19세기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또 다른 실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시도된 정치실험이었을 것이다. 후술하듯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실험적 활력을 잃고 있지만,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 언젠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로마가톨릭 교회와 비교할 때, 프로테스탄티즘이 가져온 교회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근본적으로 사제들의 조직인 로마가톨릭 교회의 조직형태에 비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모든 신자를 동등한 자격의 구성원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비유컨대,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모습이라면, 후자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로마가톨릭 교회가 유일한 보편교회로 자처하는 특징을 내세우는 것에 비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모든 제도적 교회를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로 간주하고 유일한 보편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제도적 교회, 즉 보이는 교회의 다수성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만 했고, 흔히 교파 또는 교단으로 일컬어지는 이들 사이의 관계 정립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 적어도 네 개의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을 제기한다. 첫째는 종교적 의례를 나누는 개개의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를 정치적 공동체들로 재구성하는 과제이다. 성례를 집전하는 사제들만을 교회조직으로 보고 그 밖의 신자들을 그 바깥에 배치하는 로마가톨릭 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다. 둘째는 이 개개의 프로테스탄트 정치공동체들을 신조와 교리를 공유하는 하나의 조직체로 연결하는 과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교파 또는 교단의 형태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성서해석을 통해 특정한 프로테스탄트 신조와 교리를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적 사제들을 양성하는 기구(신학교)가 자리를 잡았다. 셋째는 이와 같은 복수의 교파 또는 교단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정치적 과제이다. 로마가톨릭 교회와 달리 특정한 제도적 권위의 우위를 부정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입장에서 이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넷째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체와 그 바깥의 세속 세계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정치적 과제이다. 이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사회 속에 존재하는 종교적 권위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문제인 동시에 세속 세계의 정치적 권위, 경제적 권위, 학술적 권위, 사회적 권위 등과 제도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수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 네 차원의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프로테스탄티즘은 결코 로마가톨릭 교회를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

주지하듯 프로테스탄티즘은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애초에 성서를 유일한 권위로 놓은 뒤, 오로지 성서의 합리적인 해석과 체계화에 의존하여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신정주의적 기획을 추진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프로테스탄트 신정주의는 ‘성도들의 혁명’을 통해서 성서적 합리성에 따라 구성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가지고 정치 그 자체를 대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정(正)이요 진(眞)이며, 그 바깥의 정치는 부(不)요 위(僞)로 관념되고, 프로테스탄트들은 전자를 통해 후자를 극복·대체할 소명을 부여받은 혁명적 전위집단으로 이해된다. 프로테스탄트 신정주의는 서구 근대정치사의 한 축을 이루는 정치적 급진주의(political radicalism)의 원형이다.

이처럼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초기에 주도한 것은 성서적 합리성을 전면에 내세운 신정주의적 기획이었다. 특히 칼뱅주의는 신정주의적 관점에서 삶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추진하는 세계형성적 종교(world-formative religion)의 전형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급진적 칼뱅주의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했던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다. 청교도들은 내전의 승리를 통해 통치 권력을 장악한 뒤, 신약성서의 혁명적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면화시키면서 청교도 신앙의 국교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당위를 사회구성원 전체의 당위로 부과했고, 심지어 그 실현을 위하여 제도적 폭력의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교도 혁명가들은 통치 권력을 장악하여 신정주의적 기획을 실천하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난제에 부딪혔다.

통치 권력은 속성상 다른 교파 또는 교단의 프로테스탄트들이나 비(非)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은 물론이려니와, 비기독교인들과 인본주의자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를 포괄하여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청교도 혁명의 실패와 좌절은 급진적 칼뱅주의를 포함한 프로테스탄티즘 전체를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 종교전쟁의 처참한 혼란을 재연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성서적 합리성과 함께 자연적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에 기울어지게 된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현세적 금욕주의의 종교적 토대를 분석하는 대목은 이 점에 관하여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지만,<sup>1)</sup> 유사한 흐름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과정에서도 발생했다. 그 가운데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프로테스탄티즘 내부에 ‘관용’, 즉 ‘톨레랑스’라는 특수한 정치적 규범이 형성된 점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은 각자의 신조를 문서로 고백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구분하여 교리적 공통분모를 찾아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진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새로운 정치적 규범을 자발적으로 형성했다.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신정주의 혁명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그 내부의 진리 투쟁을 폭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규범적 계기를 확보했음을 뜻한다.

‘톨레랑스’의 정치적 규범을 기초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분기되기 시작한다. 첫째는 ‘분리주의’(separatism)로서 신정주의적 경향성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는 통치 권력을 포기하고 순수하고 엄격하면서도 열광적인 초대교회 운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청교도 혁명의 급진파들이 신정주의적 기획의 실패 이후 평화주의나 천년왕국을 지향하는 급진적 분리주의자들로 변모하는 과정은 전형적인 예이다. 둘째는 ‘이원주의’(dualism)로서 정치와 종교의 구분을 세속 세계와 영적 세계의 구분에 대응시킨 뒤, 프로테스탄티즘을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 종교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일찍이 루터파나 영국 성공회가 통치 권력과 제도적 공존을 위해 공식적으로 채택했던 노선이기도 하다. 셋째는 ‘관계주의’(relationism)로서 정치와 종교의 구분을 종교적 교리와 세속 헌법에 규정한 뒤, 프로테스탄티즘을 교회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이념적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칼뱅의 후예들이 국교의 지위를 포기한 뒤, 급진적 분리주의자들을 의식하면서 형성했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1) 막스 베버에 따르면 칼뱅주의자들은 성서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은총의 법칙성 또는 구원의 법칙성을 예들 들어 엄격구원예정설의 형태로 확인한다. 하지만 문제는 성서적 합리성을 아무리 정교하게 체계화해도 구원의 확실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베버는 리처드 박스터를 비롯한 청교도들이 일상적 삶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형성되는 자연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음을 주목한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칼뱅주의자들의 적극적인 해석은 자연적 합리성이 성서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장한 극적인 사례였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세 가지 노선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세 가지 이념형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우선 분리주의 노선은 프로테스탄트 정치공동체를 세속 정치공동체와 분리된 자치공동체로 재규정했으며, 각 자치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권위 주체로 인정했다. 이른바 ‘회중’(congregation)의 출현이다. 회중의 자율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든 이 노선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치의 방향 자체는 명백하다. 다음으로 이원주의 노선은 프로테스탄티즘을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로마가톨릭 교회의 사제 조직을 대체하는 프로테스탄트 사제 조직을 구성했다. 이 집단은 대체로 관료제의 구조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신학 및 성례에 대한 종교적 전문성을 공유하고 전수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주축이 되었다. 조직의 차원에서 이 노선을 대표하는 제도적 상징은 바로 ‘감독’(episcopal)의 존재이다. 회중과 감독이 각기 프로테스탄트 교회조직의 맨 아래와 맨 위를 표상한다면, 마지막으로 관계주의 노선은 이 둘 사이에 위를 향하여 아래를 대표하고, 아래를 향하여 위를 대표하는 독특한 매개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그 핵심은 회중에 의해 선출된 대표이면서도 동시에 그 회중을 견제하는 임무를 지니는 상호매개적 권력으로 종교적 엘리트의회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무게 중심은 아래와 위, 그리고 중간에 존재하는 종교적 엘리트의회(presbytery, synod, general assembly)에 놓이게 된다.<sup>2)</sup>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이와 같은 분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구 근대에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바탕을 이루는 지적, 이념적, 제도적 자원을 제공했다. 분리주의-회중주의는 인민주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反독재 및 분권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이원주의-감독주의는 교회와 국가의 주권적 분리, 관료적 전문성과 효율성의 요청을 뒷받침했으며, 관계주의-의회주의는 의회를 통한 대의정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특히 사법의 독립 등을 정당화했기 때문이

2) ‘분리주의’, ‘이원주의’, ‘관계주의’를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우선 ‘분리주의’는 성서가 세상의 인정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법(사랑의 신법, 즉 복음)을 선언한다고 믿고, 이 새로운 법이 아말로 기독교인이 따라야 할 법이며, 따라서 이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약성서의 십계명에서 시작하든, 신약성서의 산상수훈에서 시작하든, 이 입장은 비신앙적인 세계와 완전히 결별한 뒤, 복음, 즉 진정한 신법에 따라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실제로 창설하고자 한다. 세속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통치 권력은 복음과 무관하다. 이에 비하여 ‘이원주의’는 성서(특히 신약성서)가 요구하는 신앙공동체를 전적으로 복음에 기초한 은총의 공동체로 이해하면서도, 그 세계로부터 다시 법을 개념적으로 분리한다. 왜냐하면 법이란 원래 은총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잠시 머물러 있는 세속적 실존의 문제이며, 따라서 세속적 통치 권력(주권국가)이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때 통치 권력은 신의 주권 속에 존재하며, 국교의 확립은 그 공적 표지이자 확증이 된다. ‘관계주의’는 이 두 입장의 사이에 존재한다. 여기서는 전적으로 복음에 기초한 은총의 공동체와 세속적 실존을 다루는 통치 권력의 존재가 모두 긍정된다. 따라서 양자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논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테면 적극적 관계주의와 소극적 관계주의를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는 복음의 입장에서 성서적 합리성을 가지고 세속법을 개혁하는 것을 기독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으로 이해하는 반면, 후자는 기독교회가 복음에 기초하면서도 세속법에 나타난 자연적 합리성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다. 이 가운데 이원주의-감독주의의 영향은 후술하듯이 주권국가가 모더니티 정치를 수행하는 기본 단위로 굳어지고, 그 종교적 기초를 이루었던 국교주의가 현격히 약해지면서 갈수록 프로테스탄트적 기원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속적 주권국가 이념 그 자체로 편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두 흐름은 서로 각축하는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세속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의 형성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사회-시민사회-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미합중국 등을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근본 동력을 이루었다.

결과론이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서 가장 우세해진 것은 크게 보아 ‘관계주의’ 모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주의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통치 권력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고, 이원주의자들 역시 프로테스탄티즘이 국교의 지위를 잃은 뒤에는 관계주의를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관계주의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는 정치공동체 안팎에서 다른 종파의 프로테스탄트들이나 비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 나아가 비기독교인들과 이원주의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것인가이다. 관계주의는 이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앞서 말한 프로테스탄트 교파들 사이의 새로운 정치적 규범, 즉 ‘폴레랑스’를 정치공동체 전체에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은, 명예혁명 이후 존 로크가 주장했듯이,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기독교회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에 맡기는 것이었다.

이처럼 새로운 정치적 규범을 바탕으로 관계주의는 점차 ‘엘리트의회주의 vs 자치공동체주의’를 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우선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엘리트의회주의는 도도한 흐름을 형성한다. 이 분파는 자유민주주의의 당위와 함께 그 현실적 불가능에 주목하면서, 죄의 편만한 영향력, 이성의 인식적·실천적 한계, 자유민주주의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등을 냉정하게 통찰한다. 그리하여 이 입장이 내세우는 것은 결국 엘리트들에 의해 구성되는 대의민주정치의 세련된 구성과 운영이다. 자의적 지배, 차이의 배제, 통치자와 피치자의 불일치 등 자유민주주의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현실적인 방안은 훈련된 엘리트들로 의회를 구성한 뒤 대의정치의 미묘한 균형을 달성하는 것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교회, 국가교회, 세계교회를 연결하는 엘리트의회의 중층구조는 감독제도의 구조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정치제도이다. 엘리트의회주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대표선출과정과 대표들의 정책결정과정으로 나눈 뒤 중점을 후자, 즉 선출된 엘리트들 사이의 공화주의적 합의정치에 둔다. 압도적 다수의 프로테스탄트는 엘리트의 선출과정에만 개입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에 비하여 침례교를 비롯한 회중 교회 전통에서 성장한 자치공동체주의는 엘리트의회주의의 성과와 함께 그 어두운 측면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엘리트의회가 대의민주정치체제를 현명하게 운영하기보다 스스로 패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인간의 근본악과 자유민주주의의 딜레마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에토스인 자유민주

의적 혁명이념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의민주정치를 내세우는 엘리트의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출발점에서 보면 후퇴 또는 타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치공동체주의는 엘리트의회주의를 반대하면서, 정치공동체의 구성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치공동체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개의 신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자발적인 동의를 기초로 새로운 정치, 즉 자유민주적 교회 정치를 경험할 가능성은 오로지 자치공동체에서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어떤 경우든 자치공동체의 우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역사에서 엘리트의회주의와 자치공동체주의의 대립과 항쟁은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다양한 시도와 함께 풍성한 정치적 성과를 생산해냈다. 엘리트의회가 패권화의 경향에 취약하다면, 자치공동체는 쉽사리 지리멸렬해질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정치적 실험이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는 대표기구의 중층구조화 및 대표기구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포함하는 민주적 대의정치의 여러 가지 제도들로 결실되었다. 이 제도들은 대부분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헌법 속에 포함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치적 영향은 세속정치에도 파급되었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엘리트의회주의는 대의민주정치의 제도들을 공급했고, 자치공동체주의는 동의에 의한 지배, 즉 사회계약의 이념을 공급했다.

특히 명예혁명 이후 영국의 정치과정 및 미합중국의 건국 과정에서 이 두 노선의 치열한 경쟁은 오늘날 흔히 ‘고전적 공화주의 vs 근대적 자유주의’로 해석되는 정치적 대립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자연권 공화국’(Natural Rights Republic)이라는 독특한 모습의 국가가 탄생했다. 천부적 자연권에 따른 ‘플레랑스’와 혼합정체 및 법의 지배, 그리고 이 모두를 규정한 성문헌법을 정치공동체의 중심에 놓는 이 새로운 국가는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이 300년간의 실험을 통하여 산출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중간 결산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자연권 공화국 내부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와 관련된 정치적 긴장이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미합중국의 경우, 매디슨 민주주의, 즉 공화주의적 엘리트대의정치의 이념은 엘리트의회주의에 가까운 칼뱅주의에 연결되었고, 이에 맞서는 제퍼슨 민주주의, 즉 자연권 중심의 인민적 평등주의는 자치공동체주의에 가까운 감리교와 침례교에 의존적이었다.<sup>3)</sup>

---

3)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이러한 전개 이면에는 서구 근대법의 형성과정도 존재한다. 달리 말해, 프로테스탄티즘은 서구 근대법의 형성을 통해 ‘권력을 통한 정치’를 ‘법을 통한 정치’로 대체하고자 했으며, 오늘날 이 이념은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원리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구 근대법의 형성과정에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미친 영향은 심대하다. 예를 들어, 프로테스탄티즘은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맞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폭군방별론과 기본적 권리의 평등사상을 발전시켰다. 칼뱅주의 법이론의 발생사를 파헤친 존 위티에 따르면, 칼뱅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법적 권리로 개념화한 뒤, 그것으로 통치 권력의 한계를 규정했고, 신앙의 자유에서 시작된 법적 권리의 목록은 재산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기본적 권리의 평등사상은 프로테스탄트 공동체에서 성도의 자격을 단지 성찬과 같은 의례에 참여하는

## IV.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과 그 붕괴에 관하여

마이클 왈저는 18세기 초에 이르러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갑자기 사라진 까닭을 청교도 운동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서 찾는다. 성도들의 혁명으로서 청교도 운동은 성서적 합리성의 우위를 전제로 자연적 합리성을 아우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신약성서의 혁명적 메시지를 전면화하고자 했고, 그 작업이 성공을 거두어 역력한 유산을 남긴 까닭에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자연권 공화국’으로 귀결된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는 왈저의 이와 같은 평가를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유산이 해체 또는 붕괴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우선 앞서 언급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네 가지 과제를 환기하면서,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성과를 평가해 보자.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우선 종교적 의례를 나누는 개개의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를 회중, 감독, 의회라는 핵심 제도들을 통해 재조직했고, 이를 다시 신조와 교리를 공유하는 교파 또는 교단으로 결합했다. 나아가 여러 교파 또는 교단 사이의 관계를 관용, 즉 ‘톨레랑스’라는 새로운 정치적 규범으로 조율했으며, 종교적 자유-국교 부인-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원리를 발전시켰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이와 같은 성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속적 정치 권력의 재구성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가 천부적 자연권에 따른 ‘톨레랑스’와 혼합정체 및 법의 지배, 그리고 이 모두를 규정한 성문헌법을 정치공동체의 중심에 놓는 ‘자연권 공화국’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명예혁명에서 미합중국의 독립혁명을 잇는 앵글로-아메리칸 시민 혁명의 계보에서 탄생한 이 새로운 국가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중간 결산으로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sup>4)</sup>

---

종교적 자격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법적 자격으로 변모시켰고, 공동체 내부에서 대의 정부, 법의 지배, 삼권분립과 같은 정치제도의 혁신을 촉발했다. 아울러 이성적 자연법의 논증을 따라 일반 계약법의 원리가 서구 근대법의 토대를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혼인법의 본질이 성례로부터 계약으로 바뀌었으며, 형사 절차도 증거와 양심에 의한 재판으로 초점으로 체계화되었다.

- 4) ‘톨레랑스’라는 정치적 규범은 크게 네 단계를 거쳐 제도화되었다. 첫째는 ‘톨레랑스’를 신앙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권리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는 곧바로 신체의 자유, 소유권,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으로 확대되며 이른바 ‘권리장전’의 형식으로 목록화되었다. 둘째는 이처럼 권리의 형태로 확인된 톨레랑스의 보장 책임이 교단 또는 교파로 나누어진 프로테스탄트 교회조직이 아니라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정치공동체에 부여하는 단계이다. 앞서 말한 대로 존 로크의 관용론은 이에 관한 대표적인 입론이다. 셋째는 앞서 말한 ‘권리장전’을 자연권 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편입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권 공화국의 헌법은 ‘성문헌법’으로 진화했다. 넷째는 제도적 교회와 자연권 공화국의 관계를 국교의 부인 및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통해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역사적인 이유로 국교체제를 유지한 정치공동체에서도 국교의 실질적인 의미는 점차 의례적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정치공동체 그 자체의 세속성 또는 非종교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예도 있었으나, 어떤 경우든 정치와 종교의 제도적 분리가 헌법적 정상상태라는 점은 갈수록 분명해졌다.

‘자연권 공화국’은 세속정치의 고유성을 주장하면서도 초월적 종교성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진 국가, 즉 종교적 경건에서 출발하여 세속정치를 수행하는 국가를 표상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처럼 독특한 국가가 계속하여 존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프로테스탄티즘이 시민사회 속에서 강력한 종교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단지 신자의 숫자나 교회의 규모 문제만이 아니라 성서적 합리성과 자연적 합리성을 아우르는 종합적 차원의 설득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치 참여가 성문헌법의 정신과 제도를 깊이 존중하는 가운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속적 정치 권력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초월적 의미획득에 관하여 그 한계를 분명하게 짚는 정치적 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에너지와 열정을 계속하여 공급하고, 초월적 자유와 원초적 평등의 이념은 물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순적 길항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헌정주의적 정신과 제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환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 즉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모판으로 인식했던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가들의 이념과 그 이후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가 쌓아온 역사적 지혜를 전통을 계속하여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대혁명의 비참하고 파멸적인 전개과정에 끝없는 실망감을 가지고 1830년대 초반 미합중국을 찾았던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합중국이라는 자연권 공화국에서 바로 이와 같은 조건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갖가지 자율조직들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지도자들이 법률가들과 함께 일상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면서도 세속적 정치권력 자체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이러한 모습은 크게 보아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19세기 이후 서구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그 자리를 자연과학의 영향력이 채우기 시작하자 곧바로 실증주의(positivism)의 이름으로 자연적 합리성을 과학적 합리성으로 승격하여 성서적 합리성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운동이 개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주도해 온 관계주의는 다시 두 개의 흐름으로 분열되었다. 하나는 ‘이신론’(理神論, Deism)으로서 과학적 합리성의 우위를 수용하여 세계에 대한 신적 개입까지도 과학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신론’(人格神論, Theism)으로서 이를 거부한 채, 오로지 성서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세계에 대한 신적 개입의 근본적인 자의성을 확인하려는 흐름이다. 19세기 서구의 프로테스탄트 사회에서 전자는 이원주의를 흡수하면서 유니테리언리즘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아갔고, 후자는 분리주의와 결합하면서 대각성 운동과 근본주의 신학의 토대가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이와 같은 지적 분열은 특히 19세기 들어 서구사회에서 본격화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들이 정돈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로마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자본주의적 산업화 자체를 경계하면서 광대한 단일 조직을 바탕으로 일종의 대안 경제를 실험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프로테스탄트들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거나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두 선택 중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이신론자들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율균형체계를 받아들여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대세에 편승하고자 했고, 인격신론자들은 프로테스탄트 특유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선과 악의 투쟁 구도를 이용하여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의미를 평가하고자 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전자는 곧바로 적자생존·약육강식·우승열패를 내세우는 사회진화론으로 대체되어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제국주의적 식민주의로 이어지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고, 후자는 제국주의적 식민주의 속에서 자라난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도, 특히 공산주의에 대한 종교적 투쟁의 기초로 탈바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성과는 초월적 종교성의 차원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소거하려는 '실증적 주권국가의 이념'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결과는 서구 근대의 주도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20세기 들어 세계 곳곳에 주권국가 스스로 초월적 종교성을 독점하여 사실상 국교주의를 부활하려는 시도들로 나타나기까지 했다. 여기에는 20세기 전반을 휩쓴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는 물론이려니와 그 이후 공산주의 블록을 예외 없이 휩쓸었던 지도자 신격화 및 숭배 전통,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이슬람이나 힌두교의 근본주의 종교화 및 정치적 전면화가 모두 포함된다. 이 시도들은 오늘날까지도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성과가 무색하리 만큼, 세속적 정치 권력이 스스로 정치와 종교의 통합을 추구하고 정치공동체 각 구성원의 종교적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를 반복적으로 재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우선 주목할 점은 자유민주주의의 모판이자 실험장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위상이 갈수록 축소되어 사실상 특정한 교파 또는 교단의 내부 문제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프랑스대혁명을 전후하여 서구 근대의 세속적 정치 권력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들을 정면으로 수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교회 정치의 범주를 벗어나 실증적 주권국가 단위로 이해되고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헌법재판민주주의-직접행동민주주의로 이어지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계보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자연권 공화국의 세속화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종교적 영향력이 적어지고 비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및 무신론을 포함한 타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결국 프로테스탄티즘을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전제하면서 세속적 정치 권력에 대하여 초월적 종교성에 대한 깊은 존중 대신 종교적 세속성 또는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경향을 낳았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주된 문제는 실증적 주권국가의 자유민

주주의 운동을 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흐름에 적응하는 문제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는 안팎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무대였던 좁은 의미의 제도적 교회를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테스탄트 사회조직들을 구성하고 이들을 통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세속정치참여가 본격화되었던 점이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주축을 이룬 각종 선교단체, YMCA/YWCA와 같은 시민사회단체, 기독교 대학을 비롯한 각종 학교, 병원, 언론,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조직, 노동조합, 국제조직들이 그러하며, 특히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치적 영향력이 심대했던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는 기독교 정당들이 조직되어 세속정치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둘째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기왕의 ‘엘리트의회주의 vs 자치공동체주의’의 구도를 우회하여 이른바 일종의 ‘지도자감독주의’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카리스마틱 프로테스탄티즘의 비약적인 성장 및 대중적 소통을 가능케 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애플, 거대집회장, 영상매체, 인터넷 등)의 발전에 힘입은 현상으로서, 대의민주정치의 의회나 자치공동체의 회중처럼 신중하게 고안된 정치적 대표과정을 거치지 않고 익명의 대중과 극소수의 정치지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제공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이러한 변화는 분명 불가피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경건에서 출발하여 세속정치를 수행하는 ‘자연권 공화국’이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소산임을 기억할 때, 그 이면에는 매우 안타까운 측면도 존재한다. 우선 각종 사회조직이나 기독교 정당을 통한 세속정치참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을 수호하려는 메타적 차원을 포기하고 ‘자연권 공화국’ 내부의 이익정치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로마가 톨릭 교회가 광대한 단일 조직을 바탕으로 특히 제국주의적 식민주의가 종말을 고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연법사상의 부활을 지원하면서 세계인권선언 등의 인권 헌장을 중심으로 상당한 일관성을 가지고 메타적 차원을 견지해 온 것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같은 시기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 내부에 일종의 ‘지도자감독주의’가 등장한 것에도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각종 사회조직이나 기독교 정당을 통한 세속정치참여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조직 내부의 정치적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한 연결 고리로 소수의 지도자 감독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이 붕괴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성격이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운동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속적 정치 권력이 사회 전체에 요청하는 세속적 차원의 당위로 변모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운동의 모판이자 실험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채, 엘리트의회의 패권추구와 자치공동체의 지리멸렬을 거쳐 점차 ‘지도자감독주의’에 기울어졌으나, 대중스타를 방불케 하는 소수의 지도자 감독과 그 카리스마에 의존적인 대형교회 체인망은 프로테스탄티즘의 본질을 위협하는 측면마저 내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심화하며 동시에 자기혁신을 도모해 왔던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과연 이대로 좌초하고 말 것인가?

## V.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의 관계 상황

대한민국은 非서구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단기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확립한 매우 드문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공의 요인으로서 非서구 사회로서는 예외적으로 커다란 기독교 신자집단의 규모, 특히 전인구의 1/4에 가까운 프로테스탄트들의 존재를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기독교 신자, 특히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착확립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거론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비관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는 2022년 10월 현재의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사태의 한 가지 이유는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 및 경건한 세속정치의 붕괴과정을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가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의 선교 초기부터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초기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가들의 핵심 주장과 신정주의적 기획의 매혹,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고민 및 그 성과인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기획의 위대함, 나아가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이 붕괴한 이후에 등장한 ‘실증적 주권국가’의 위험성 등 앞에 동시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때그때의 정치적 맥락과 이해관계, 또는 심지어 각자의 편익에 따라 그러한 정치신학적 자원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곤 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종파들은 각자의 교회 정치적 전통을 지키는 대신, 한국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는 대단히 특이한 교회정치적 혼종(hybrid)을 배태하게 되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교단이 장로교회의 정치제도인 장로직제를 임기직이 아니라 향존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나 대형교회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도자감독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개개의 교회나 교단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주의 등 프로테스탄티즘 내부의 다양한 교파들은 각각의 교회정치 모델들을 서구로부터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들 각각이 자유민주주의 실험의 결과라는 것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관찰로는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한 축이었던 회중에 토대를 둔 자치공동체주의가 거의 자취를 감춘 가운데, 향존직 장로제도에 기초한 엘리트 의회주의와 카리스마적 목회자에 의존적인 지도자감독주의가 어색하게 공존하고 있는 정도가

솔직한 현실이 아닐까 싶다. 그나마도 엘리트의회주의자들은 교회 안팎의 패권을 추구한다는 추문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 핵심인 엘리트들의 충원 과정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중심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스스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지도부를 자임하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대형 교회들의 세습 파문과 교단 총회의 불법 선거 논란 등으로 안팎의 비판에 시달리면서도, 프로테스탄트 각 교단 또는 교단 연합체의 대표성을 차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세속적 정치권력의 핵심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비록 여러 차례의 기독교 정당운동은 실패를 거두었지만, 세속적 정치권력에 대한 지지와 강복을 제도적 교회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교환하는 전통적인 유대관계는 끈질기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개별 교회 차원과 국가교회 차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 또는 비대칭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교회 차원의 정치적 의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으며, 개별 교회 차원의 교회 정치는 아예 조직 자체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서 국가교회 차원이 비대칭적으로 강화된 까닭은 지난 19세기 말 이래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친미개화반공노선이라는 특유의 정치노선에 따라 한반도에서 근대국가주의를 선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일제 식민 지배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종교적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안 정치 운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특히 한국 전쟁과 군사정권을 거치는 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오히려 반공주의와 경제개발을 축으로 하는 ‘실증적 주권국가 이념’에 국가교회 차원에서 종속되었고, 그와 같은 특징은 민주화 이후에도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프로테스탄트 인구의 현격한 감소와 함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와 함께 공동체 상실의 위기에 부딪히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 자체의 급격한 위축이 예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마주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연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로마카톨릭 교회의 벤치마킹이나 ‘정치로부터의 철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본질을 포기하는 선택이며 세계-형성적 기독교로부터의 퇴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원칙을 저버리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여전히 중요한 지니고 있다. 규범적 차원에서 자유의 초월적인 정초, 원초적인 평등과 민주정치의 연결, 관용의 지속적 확대 지향성, 죄의 편만한 영향력과 정치적 훈련의 필요성, 모범의 정치라는 이상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제도적 차원에서도 종교적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세계-국가-지역을 연결하는 중층적 대의 정체의

필수성, 자유민주주의 실험의 다양한 가능성, 헌법이라는 정치적 도구와 그 속에 포함된 미묘한 정치적 지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비롯한 세련된 정치제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새로운 무대를 찾는 것이다. 지금까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제도적 교회, 즉 사제중심의 종교조직에 머물러 있었으나, 과감하게 이를 벗어나서 새로운 무대를 확보할 필요는 매우 크다. 앞에서 말했듯이, 프랑크대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주요 무대가 '실증적 주권국가'로 옮겨진 뒤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무대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중요성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여기에 지난 세기 후반 이후 자유민주주의 운동은 좁은 의미 정치 영역을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은 물론 국제적 차원까지 급속하게 확대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이라면, 사제중심의 종교조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전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무대를 옮기는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주목할 대상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테스탄트 결사체들이다. 굳이 프로테스탄트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면, 다양한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결사체들로 범위를 확대해도 무방하다. 각종 선교단체, YMCA/YWCA와 같은 사회조직, 기독교 대학을 비롯한 각종 학교, 병원,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조직, 노동조합, NGO, 나아가 기독교 정당과 같은 결사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제중심의 종교조직(Churchian network)와 구분되는 크리스천 결사체(Christian association)로서 프로테스탄티즘의 핵심 교리인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의 일부가 된다.

흥미롭게도 크리스천 결사체들을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주요 무대로 삼는 것은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바이다. 19세기 말 이후 한반도 역사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유민주주의 운동에서 지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로 다음의 다섯 시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①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이끌던 대한제국 초기 ②3.1운동에서 상해임시정부, 독립군, YMCA, 신간회 등으로 이어진 독립운동기 ③조만식과 조선민주당이 활약한 해방공간의 초기 ④박정희의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1970년대 중반기 ⑤민주화이행국면에서 시민운동을 향도했던 경실련 초기. 이 시기들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공유한 특징은 한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비교하여 자유민주주의 운동에 더 충실했다는 점과 함께 크리스천 결사체들이 조직적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 당분간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무대를 전향적으로 옮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에 관하여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깊은 위기의식이 번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은 종교적 네트워크를 장악한 대형교회와 소수의 지도자감독이 대표하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특이한 변형으로 퇴행할 가능성마저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을 오히려 배반하고 있는 사제중

심의 종교조직을 과감하게 우회하여 다양한 크리스천 결사체들을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무대로 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면, 혹시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서 결사체의 형태로 크리스천들을 결집하고, 문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들의 활발한 개입과 연대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을 심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제안은 한 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동떨어진 현재의 교회 정치로부터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을 당분간 이격시켜 절망과 체념을 떨치고 개혁 추진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것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 정치의 민주화를 넘어 사회 각 분야 및 국제적 차원의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심화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프로테스탄트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크리스천 결사체라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새로운 무대를 통해 성숙한 정치적 엘리트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 즈음에는 제도적 종교조직에서도 다시금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주된 무대를 제도적 종교조직에서 크리스천 결사체로 옮기려면 많은 재조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제중심의 종교조직에 일방적으로 결부된 프로테스탄트들의 조직구조를 재편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학적 강조점의 재조정과 함께 재정 운영, 엘리트의 양성과 배치 등 손보아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를 위한 준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종합적인 개혁의 청사진을 짜고 동시적으로 이를 구현할 계기를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의 뜻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